

내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관심 집중... 여야 전운 고조

野·시민단체, 주말尹 거부권 비판·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고준위방폐물법 등 민생법 출제 우려도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패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될 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법안이 줄줄이 폐기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법 추진을 주도해 온 민주당 등 야권 정당은 전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정쟁 법안도 본회의날 강행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특검법 외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

한 만큼 재의결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막판까지 이탈 표 단속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 지도부는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용·최재형 의원)으로 늘자 내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17표가 나온다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인 데다 찬성표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표류했던 민생법안들은 폐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여야가 임기 종료까지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출제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 등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법), 대형마트 휴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협회

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를 한도

(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김해나 기자·연합뉴스 khn@

국힘 전당대회, 7말8초 가닥

이번주 당 선관위 발족

국민의힘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한여름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대 개최 시기와 관련해 지도부 내 의견을 수렴 중이고, 이번 주 정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이 "7월 말~8월 중순 개최" 가능성을 묻자 "지금 거론되는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동안 전대 시기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설과 맞물리며 당내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한 전 위원장 등판을 경계하거나 반대하는 쪽은 전대가 늦어질수록 전 위원이 총선 패배 책임을 탈색하고 출마 명분을 쌓을 시간을 벌 게 된다며 전대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6월 말~7월 초' 전대 개최가 한때 유력해보였으나 물리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전대를 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고, 한달가량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에

서 "원내 상황과 더불어민주당 전대 일정을 고려해 우리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8월 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뽑는 만큼 여당도 그에 맞춰 지도부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새 여당 대표를 선출하면 여론의 주목도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대 시기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내부 논의와 비대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며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위원장은 당 원로나 중진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발족과 함께 전대 를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이 당 대표 선출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지도부도 이런 방향에 좀 더 무게를 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주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착수

시도당 위원장 선출 앞 선거제 개편...권리당원 표 비중 상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26일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원권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항 손질"이라며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권을 신설하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시도당 위원장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현재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은 50대 50인데, 권리당원 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 50%대 권리당원 50%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며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전당대회 전에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니 당장 이번 주부터 선거제 개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60대 1'(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와 같다는 뜻)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권리당

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올려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이 재차 상향 조정되는 것이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재설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전국당원대회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 위원장 선출부터 당원권이 대폭 강화되면서 친명계로 넘어간 당내 헤게모니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연합뉴스 kroh@kwangju.co.kr

국힘 "민주당 내 중부세 개편 제안 환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종합부동산세(중부세)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

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중부세 폐지' 구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을 적

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중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이달 초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중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전날 중부세의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배
전국민의 경제 부담 줄이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